

“각국 주도권 경쟁 치열... 초거대 AI에 9090억 투입할 것”

尹 대통령, 초거대 AI 도약 회의
“AI 발전, 우수인재 양성에 달려
정부 지원, 투자·도전에 마중물
민간의 투자·도전, AI경쟁 좌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초거대 인공지능(종합적 인지·판단·추론 AI)’ 등 AI 산업 발전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AI·디지털 분야와 AI·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총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주재한 자리에서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를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고,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광주 AI 영재고등학교, AI 사관학교 및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등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정부의 지원

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AI와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갖고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프랑스 소르본대학에서 ‘디지털 윤리원칙’을 제시하면서 든 예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AI 규범 정립의 당위성을 자동차 개발 초기의 배기가스 규제, 책임보험 강제 정책에 빗대며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배기가스 규제를 할 때 반발이 많았다. 그렇지만 배기가스 규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의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고,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책임보험 시스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를 쓰는 데 있어서의 법적인 리스크를 없애줌으로써 더 안전하게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과 AI가 남용되고, 생기는 부작용이 인구가 고생해서

축적해 놓은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며 “물론 과도한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 서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남용을 방지하는, 부작용을 없애면서 AI와 디지털을 더 잘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며 “가짜뉴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AI와 디지털을 통해 빛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G20(주요 20개국)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백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격납고 둘러보는 김정은·푸틴

김정은(오른쪽 두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인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로켓 조립 격납고를 둘러보며 얘기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밝혔다. /뉴스1

“한전 적자 원인, 탈원전... 두산도 구조조정”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청문회
“안전 에너지원, 경제성 있게 운영
탄소중립 중장기 목표 갖춰나가야”



김 의원이 “문정부 때 탈원전하지도 못했다. 원전가동률과 영업적자와 오히려 반비례하는데 전정부 탓을 한다”고 질타하며 재차 묻자 방 후보자는 “(문정부 때) 원전 가동률도 줄었고 원전의 신설 갯수도 줄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수출입은행장 시절을 떠올리며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3일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으로 유가 인상과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장관에 임명되면 수출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오피스텔 전세금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부인했으나, 자녀 불법 유학과 부모 소득 부당공제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전력의 적자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전기요금에 비용을 반영해서 구성돼 손해 보지 않는 구조이면 적자가 나지 않겠지”라고 반문하며 “짜게 책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수출 플러스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 산업부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시급하다. 주요 수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중동·아세안·동유럽 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정립하겠다”며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방 후보자의 장녀 전세금 지원, 공무 관련 주식 투자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 미제출로 공방이 벌어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주담대 영향... 가계대출 한달새 6.9조 급증

한은, 8월 중 금융시장 동향
주담대 잔액 872.8조, 7조 늘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1000억 ↓

가계대출이 한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증자리론 등을 통해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차주 상환능력과 실소유 여부를 확인해 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규모다.

◆8월 주담대 7조원 ↑...당분간 증가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매매거래가 늘며 주담대가 증가한 영향이다. 주담대 잔액은 872조8000억원으로 한달 새 7조원 늘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세자금 수요는 둔화했지만, 주택구입 관련 자금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며 “주택을 계약하고, 주담대까지 2~3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5~6월 거래된 수요가 주담대 증가를 이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4월 3만4000호에서 5월 3만7000호, 6월 3만6000호로 증가했다. 수도권 매매거래량도 4월 1만5000호에서 5월 1만6000호, 6월 1만6000호로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미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46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윤 차장은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DSR 규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타대출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당분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기간 50→40년 축소
금융당국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가능성과 실소유 여부에 따라 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주담대가 과잉 대출되거나 투기수요로 작용할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며 “주택담보대출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만기 기간을 설정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